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2호)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4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7
※ 참고자료	12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6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국제박람회기구 165개 회원국 중 29표만을 득표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외교 참사’라 불릴 만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 정부가 선전했던 유치 가능성은 긍정적·희망적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와 차이가 너무 커 정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관한 어떤 반성도 없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 중 공적개발원조(ODA) 및 투자 공약을 남발하고 외교부는 국제박람회 기구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는 이

같은 약속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난 외교참사에 대한 묵인은 앞으로의 참사까지 용납하자는 것이기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냉철한 평가를 촉구하며, 후일 추진될 국제 행사의 유치를 성공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유치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한다.
2. 윤석열 정부의 소위 정부 관계자들은 ‘49대51까지 쫓아왔고 결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매우 큰 동향을 언론을 통해 전파하고, 외교부는 유치 결정일 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공관장들에게 같은 취지의 전문을 보내 막판 유치를 독려했던 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실제 결과와는 매우 격차가 컸던 오판의 원인을 명명백백 규명하기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제공 약속, 외교부의 재외공관 설치 계획 등이 원래의 사업 취지나 실제 필요 이상으로 결정되어 국고의 낭비를 초

래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냉철한 평가와 설명을 촉구한다.

4.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

제안이유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제박람회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 활동 자체만이 아니라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동향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결과와 매우 큰 오차를 한 원인, 이를 언론과 재외공관장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한 경위, 공교롭게도 해당 시점에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및 투자 공약을 남발하고 회원국 재외공관 설치 계획을 공개한 일 등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광범위함.

이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냉철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오랜 염원과 희망을 악용하고, 추후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일로 남을 것임.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김준형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권을 행사한 국제박람회기구(BIE) 165개 회원국 중 29표만을 득표하여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것임.

2030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 전망을 한 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하에 5년마다 개최되는 등록박람회임.

<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박람회 구분 >

구분	등록박람회	인정박람회
주제	제한 없음	특정분야 주제
개최간격/행사기간	5년/6개월	등록박람회 사이/3개월
전시면적	제한 없음	최대 25 ha(7만5,000평)
전시관 건립 경비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국가관 건설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축, 참가국에게 유·무상 임대
개최사례	상해('10), 밀라노('15) 두바이('21), 오사카('25 예정)	대전('93), 여수('12), 아스타나('17)

(자료: 외교부)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하였음.

< 2030부산엑스포 개요 >

- 개최기간 : 2030. 5. 1 ~ 10. 31(6개월)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4만㎡)
- 주 제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개최비용(잠정) : 약 6.5조원
- 개최 의의
 - 유치성공시 세계 12번째(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록박람회 개최 국가
 - * 벨기에, 프랑스, 미국, 아이티,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이탈리아, UAE
- 개최효과(잠정)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

(출처: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

정부는 2019년 5월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유치 활동을 시작하였고, 동년 12월 국무총리 훈령¹⁾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²⁾을 출범시켰음.

2020년 12월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향을 공식 표명하고,³⁾ 2021년 6월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동년 7월 민간 차원의 재단법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창립되었으며, 정부는 동년 10월 정부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후 정부는 2022년 7월 대통령령⁴⁾에 따라 기존 민간 재단법인 “20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47호, 2019. 11. 18., 제정]

2) 단장은 통상교섭본부장 겸직, 1국 3팀(공무원 13명, KOTRA 1명)으로 구성

3) 러시아(모스크바)도 유치의향을 공식표명

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783호, 2022. 7. 8., 제정]

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개편·출범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여 유치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추진을 담당 하도록 하였음.

2023년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가 진행된 이후, 동년 11월 제173차 BIE 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전자 비밀투표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19표를 얻어 유치가 확정되었음.

<2030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경과>

- 2014.7월 부산엑스포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의향 표명(부산시)
- 2018.4월 국제행사 심사위원회(기재부)의 타당성 심사 통과
- 2019.5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산업부)
- 2019.12월 총리 훈령에 근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발족(산업부 산하)
-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1국 3팀(공무원13명, KOTRA 1명)으로 구성
- 2020.12월 제167차 BIE 총회에서 유치의향 표명
- 2021.6월 제168차 BIE 총회에서 유치신청서 제출
- 2021.7월 민간 재단법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립 및 창립총회 개최
- 2021.10월 2030 유치후보국 신청 마감(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총 5개 후보국 유치 신청) ※ 러시아 유치신청 자진철회(22.5월), 우크라이나 후보자격 상실(23.6월)
- 2021.11월 제1차 정부유치지원위원회 개최(위원장 : 국무총리)
- 2022.7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개편·출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설치, 유치위 운영 및 유치활동 전반 총괄·추진
- 2022.9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BIE 제출
- 2023.4월 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진행
- 2023.11월 개최지 결정투표(제173차 BIE 총회)

(자료: 외교부)

<2030세계박람회 유치 투표 방법 및 결과>

○ 투표 방법(BIE 규정)

- (투표 원칙) 1국 1표 원칙, 대리 투표 불가
- (투표 번호) 입후보 순서에 따라 배정, 투표 전 과정에서 동일 번호
- (투표 방식) 전자 비밀투표로 진행
- (참석자) 총회 공식 대표단만 회의장 입장 가능
- (투표 진행) 1차 투표시 투표국 2/3 득표시 개최지 결정, 어떤 후보지도 2/3 득표하지 못한 경우, 최저 득표지가 탈락하고 2차 투표 진행

○ 투표 결과

- 1차 투표에서 사우디 119표로 유치 확정('23.11.28)

사우디	한국	이탈리아	기권	투표권 미행사	투표권 미보유	총 BIE 회원국
119	29	17	0	14	3	182개국
(투표한 국가) 165개국						
(투표권 보유국가) 179개국						

(자료: 외교부)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의안은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 실패의 원인 및 결과 분석 촉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약속 및 재외 공관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 촉구,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을 시 국정조사를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내용
안 제1호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 제공 및 유치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 촉구
안 제2호	49대51까지 쫓아왔고 결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막판 유치활동 독려 관련, 실제 결과와는 매우 격차가 컸던 오판의 원인 규명 촉구
안 제3호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제공 약속, 외교부의 재외공관 설치 계획 등과 관련 원래의 사업 취지나 필요 이상으로 결정되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평가와 설명 촉구
안 제4호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실시 결의

동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결의안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유치활동 경과,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결과와 격차가 컸던 유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하여 합리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추진되는 국제행사 유치 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유치활동 경과 등에 대해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해 왔으며, 투표 종료 후 2023년 11월 29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유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입장(평가와 반성 포함)이 표명되었다는 입장임.

둘째, 동 결의안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제공 약속, 외교부의 재외공관 설치 계획 등이 원래의 사업 취지나 필요 이상으로 결정되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부의 평가와 설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시기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재외공관 설치 계획 발표⁵⁾ 등이 겹친 데 대하여,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국가사업에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정책실행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바 정책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최근 3년간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예산현황>

(백만원, %)

단위사업		2022년 예산	2023년		2024년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국제개발협력		1,101,557	1,297,850	17.8%	1,968,035	51.6%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13,212	242,640	13.8%	275,641	13.6%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76,774	238,517	34.9%	306,614	28.6%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66,397	97,225	46.4%	73,671	-24.2%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43,351	81,632	88.3%	133,274	63.3%
	글로벌 프로그램	256,143	229,553	-10.4%	313,652	36.6%
	협력사업 지원	60,651	51,705	-14.7%	59,260	14.6%
	전략적협력강화	8,000	8,000	0.0%	8,000	0.0%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277,029	348,578	25.8%	797,923	128.9%

5) 외교부 보도자료, '재외공관 추가 개설로 국민 권익 보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력 강화한다', 2023. 11. 7.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증가는 정부의 ‘제3차 국제 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21-’25)’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지원, 최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 지원 확대 등의 기조 하에 수원국의 수요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ODA 사업을 발굴, 추진한 것으로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대가로 공약을 한 것은 아니며,

재외공관 설치 확대 필요성은 외교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양자관계 관리·강화 차원에서 국회를 포함한 각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12개국에 공관 신설을 발표한 것은 상호주의를 포함⁶⁾,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함.⁷⁾

셋째, 동 결의안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외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⁸⁾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⁹⁾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승인을

6) 신설공관 12개 중 8개[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에스토니아, 잠비아, 조지아(승격)]가 상호주의 해당국(우리나라에 주한대사관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나, 현지에는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이며, 과거 공관 철수 후 재개설 국가, 한국전 참전국, 광물자원·인프라·원전 수주 등 경제적 측면과 양국 관계 및 재외국민 보호·영사 서비스 제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임

7) 2023년 11월 기준 수교국 192개국 중 아직 우리 공관이 설치되지 못한 73개국의 90% 이상이 BIE회원국(67개국)임.

8)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

받아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실패를 국정조사의 안건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결의안의 용어와 관련하여 “2030부산엑스포”는 국무회의 훈령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공식명칭으로 한바, “2030 부산세계박람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결의안 주문에서 “국제박람회기구 165개 회원국 중 29표만을 득표”라는 표현은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 중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 165개국을 뜻하는 것이므로 “투표권을 행사한 국제박람회기구 165개 회원국”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 6788-5266

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참고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앞 보고

※ 외교부는 총 14회 중 11회 보고자료 제출(주요 내용 : 유치교섭활동 현황 및 계획)

차수(일시)	의사일정 및 보고 안건
제1차 2022.2.9.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건의사항 청취의 건 - 부산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2022.4.13.	1.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현황 및 향후계획 나.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 계획 다. 국방부 : 부산항북항 미군시설 이전 라.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 보고 마. 해양수산부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등 바. 기획재정부 : 2030세계박람회 연관사업 예타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사. 부산광역시 : 주요 현안사항 등 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동향 및 향후계획
제3차 2022.6.30.	1. 제2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보고 가. 부산광역시 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4차 2022.8.17.	1.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현황 및 향후계획 나. 국방부 : 부산항북항 미군시설 이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다. 해양수산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및 부지조성 라. 기획재정부 : 2030세계박람회 연관사업 예타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마.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 계획 바. 국토교통부 : 특별교통대책 수립 방향 및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 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동향 및 향후계획 아. 부산광역시 :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제5차 2022.10.26.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진행 경과 보고(중간점검)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추진현황 나. 산업통상자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다.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활동 현황 및 계획 라. 기획재정부 : '23년도 유치 지원 관련 예산안 보고 및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예타 결과 마. 국방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부산항 미군시설 이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바. 환경부 : 유치지원 현황 및 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응 현황 및 대응방안 사.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아. 해양수산부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자. 부산광역시 :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차수(일시)	의사일정 및 보고 안건
제6차 2022.11.24.	1. 제3차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상황 보고 가.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활동 현황 및 계획 나. 부산광역시 :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다. 산업통상자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라. 국토교통부 : 철도·도로 등 SOC 확충계획 및 가덕도 관련 조기보상계획 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제3차 경쟁 PT 추진계획
제7차 2022.12.28.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8차 2023.2.9.	1. 업무보고 가. 국방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부산항 미군시설 이전 진행상황 등 나. 해양수산부 : 북항 내 박람회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 다. 부산광역시 : 부산시 주요 추진사항 보고 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마.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바.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3년 상반기 대외유치교섭 계획 사. 국토교통부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아. 기획재정부 : '23년도 유치 지원 관련 예산안 보고
제9차 2023.3.15.	1.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2.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준비보고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현지 실사 개요 및 주요 내용 등 나. 부산광역시 : BIE 현지실사 부산시 준비사항 보고 3. 업무보고 가.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3년 상반기 유치교섭 현황 및 계획 나.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10차 2023.4.26.	1.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결과보고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현지 실사 개요 및 실사 결과 등 나. 부산광역시 2.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 '23년도 부산 EXPO 유치 지원 예산 및 집행현황 나.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현황 및 계획
제11차 2023.6.13.	1.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황 보고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 세계박람회 제172차 총회 및 제4차 경쟁 PT 등 나. 부산광역시 2. 업무보고 가.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현황 및 계획 나. 기획재정부 : '23년도 부산 EXPO 유치 지원 예산 다.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제12차 2023.7.13.	1. 제4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보고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제172차 BIE 총회 결과 보고 나. 부산광역시 2.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 부산 EXPO 유치지원 예산 및 집행현황 나.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현황 및 계획 다.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차수(일시)	의사일정 및 보고 안건
제13차 2023.9.21.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 현황 및 계획 다.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및 건설공단 설립 추진현황 라. 해양수산부 : 북항 내 박람회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 마. 부산광역시 : 부산시 주요 추진사항 보고 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경쟁 동향 및 향후계획
제14차 2023.12.13.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 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제173차 BIE 총회 및 투표결과 나. 외교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 결과 보고 다.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및 건설공단 설립 추진현황 라. 기획재정부 마. 부산광역시